

거대 정당 '당원 구조'의 허상과 기득권 정치의 모순

지방선거 전후 권리당원 급증 실태와 '1인 1표제' 폐지 논란의 본질 분석

연구기관: 우리동네당 정책연구소

보고서 번호: WP-2026-04

발행일: 2026년 6월 10일

연구책임: 정책연구팀

1. '300만 당원 시대'의 실태와 동원형 구조의 허상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정당들은 수백만 명의 당원 확보를 명분으로 대중정당화를 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로컬 정당인 '우리동네당'의 시각에서 진단한 거대 정당의 당원 구조는 정당 민주주의의 양적 질적 성장이 아니라, 공직선거 경선 제도의 한계가 초래한 '기형적인 동원 정치의 결과물'에 가깝다.

1) 지방선거 직전 권리당원 폭발적 증가 추이

- 통계적 비정상성 유발:** 민주당의 선거인단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5년 8월 전당대회 당시 등록된 권리당원은 약 112만 명**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차기 지방선거 공천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이 수치는 단기간에 **약 150만 명으로 가파르게 급증**했다.
- 예비후보자 중심의 '경선용 머릿수 채우기':** 불과 수개월 사이에 38만 명에 달하는 권리당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상은 시민들의 자발적 입당이 아닌,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예비후보자)들이 경선 승리를 목적으로 조직을 총동원해 당원을 확보한 결과로 귀결된다.

2) 무분별한 당원 가입에 따른 정당 정체성 오염

당내 경선 투표권이 부여되는 권리당원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예비후보자들은 학연·지연·혈연을 망라한 무차별적 가입 신청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당의 강령이나 이념적 지향점에 전혀 동의하지 않거나, 심지어 타당을 골성으로 지지하는 주민들까지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대거 가입**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이는 정당의 정책적 유대감을 무너뜨리고, 선거철 조직 동원 수단으로서의 허수 당원만 양산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았다.

2. 기득권 수호를 위한 '1인 1표제' 후퇴 논란과 현역 의원의 위기감

최근 민주당 내 현역 국회의원과 원로 그룹을 중심으로 당대표 선거 등 주요 의사결정에서 표의 증가성을 확보했던 '1인 1표제(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 평등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조직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들은 과거와 같이 대의원 표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핵심 진단] 1인 1표제 폐지 주장의 정치공학적 배경

겉으로는 '당의 안정성 확보'와 '중앙당 통제력 유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본질은 지방선거 경선 결과에서 나타난 기득권의 붕괴 현상에 대응하고, 차기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사수하기 위한 '정치적 방어기제'이다.

1) 지방선거 경선 패배의 원인 오독(誤讀)과 책임 전가

- **현역 기득권 체제의 침몰:** 이번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강력한 지역 조직을 보유하고 있던 수많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대리인이나 기존 자치단체장들이 정치 신인 및 원외 예비후보들에게 패배하는 이변이출했다.
- **제도를 향한 책임 전가:** 현역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패배 원인을 표의 등가성이 확보된 '1인 1표제'로 돌리고 있다. 자신들이 지배력을 행사하던 '대의원 조직 표'의 가중치가 사라지자 일반 당원 통제가 불가능해져 졌다는 인식이다.

2) '동원된 당원 구조'가 초래한 부메랑 효과

그러나 현역 의원들의 진단은 인과관계를 오인한 결과다. 현역 의원과 기존 단체장들을 꺾은 원외 신인 세력 역시 정책적 우위가 아닌, 1인 1표제 시스템하에서 앞서 지적한 '**단기간 경선용 당원 대거 동원(112만 명 → 150만 명 증가의 주역)**' 전략을 동일하게 구사하여 승리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과 인물 검증이 실종된 채 '누가 더 단기간에 허수 당원을 많이 끌어모았는가'의 머릿수 싸움에서 현역 기득권이 신흥 동원 세력에 밀린 것에 불과하다.

3) 2028년 총선을 겨냥한 현역 의원들의 생존 전략

공천권과 직결되는 차기 2028년 제23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당대표 선거 제도의 개정을 핑계로 '1인 1표제 폐지' 및 대의원 가중치 부활을 추진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들이 완벽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의원 중심 체제로 당권을 재편해야만 **2028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지역구 장악력을 안전하게 수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구조적 모순 분석: 표면적 명분과 권력 구조의 실태

분석 대상	거대 정당의 표면적 명분	로컬 정당(우리동네당)의 실증 진단
당원 150만 명 팽창 (단기 38만 명 급증)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 및 대중정당 체제의 안정적 확립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급조한 ' 경선용 중 이 당원 ' 및 타당 지지자가 혼입된 왜곡된 구조
1인 1표제 폐지론 (대의원 가중치 부활)	정당 고관여층 포퓰리즘 방지 및 당 운영의 안정성 제고	지선 패배 후 위기감을 느낀 현역 의원들의 2028년 총선 공천 기득권 사수 목적
공직선거 경선 제도	당원의 직접 참여를 통한 민주적 후보 선출 방식 발전	인물·정책 검증 메커니즘이 완전히 상실된 채 전개되는 ' 동원력 위주의 머릿수 게임 '

4. 결론 및 정책 제언: '수의 정치'에서 '정체성 중심의 생활 정치'로

이번 지방선거 공천 및 경선 과정은 거대 정당이 대외적으로 자랑하던 '수백만 당원 시대'의 실체가 얼마나 취약한 사상누각(沙上樓閣)인지를 실증적으로 증명했다. 112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급증한 이면에는 정당의 가치와 무관한 경선용 도구들이 혼재해 있다. 정당의 진정한 민주성과 생명력은 당원의 양적 숫자가 아니라, **당의 정체성과 가치에 진심으로 연대하는 당원의 '질(質)'**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대한민국 정당 정치의 개혁과 우리 '우리동네당'의 대안적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 **첫째, 선거철 임시 동원형 당원 구조의 원천적 탈피:** 허수의 당원 숫자에 집착하는 거대 정당의 양적 경쟁을 지양하고, 상시적으로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실질적 당원 구조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 **둘째, '1인 1표제'의 정당 정착 및 기득권 정치 타파:** 대의원제 가중치 부활 등 기득권 의원들의 공천 수호용 제도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표의 평등한 가치를 기반으로 한 당내 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 **셋째, 생활 밀착형 로컬 정체성 정치의 구현:** 선거철 배타적 표 동원의 마중물로 전락한 당원 개념을 혁신하여, 일상적 삶의 궤적과 지역의 당면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진정한 권리당원주의'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